

가상자산 선진화법안 논의 지지부진... 연내 통과도 불투명

여·야 '디지털자산법' 논의 공감 상임위 등 국회 재편에 시간 걸리고 美 상원 '클래리티법' 논의 정체 "거래소들, 수익 99% 수수료 의존 법인거래 허용 등 규제 해소 절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국내 가상 자산 관련법 및 규제 선진화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후반기를 맞아 재편에 들어가며 핵심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제동이 걸렸고, 해외에서도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지연되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포함한 원 구성을 마친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앞선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에 각각 48일과 54일이 소요됐던 만큼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가 재편 과정에 돌입하면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이 예고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디지털자

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해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현안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에 포함됐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여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이지만,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

의 입법 필요성에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제 표준에 뒤처진 규제 상황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으며, 통화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이 송금 편의성과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금융업의 차세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여·야 간의 공감대에도 법안 논의 재개

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논의할 정부위원회의 원 구성이 결정되지 않았고, 2년 임기의 정부위원회 위원장도 야당에서 여당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다. 법안을 주도했던 여당 디지털자산TF도 하반기 국회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이후 논의가 재개되면 연내 입법도 불투명해진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관련 논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상품성'으로 분류해 중북규제를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9% 이상이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당 법안은 사실상의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미 상원에서 입법이 정체되고 있다. 지난 5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래리티법이 최종 인준된다면 미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금 완화 등 법안 내용 일부에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입법을 위한 협상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논의 및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주요 거래소의 매출이 급감한 만큼, 국내거래소의 생존을 위해선 법인거래 허용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는 수익의 99%를 개인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출이 급감한 현재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는 생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올해 안에 기본법이 통과되고 법인거래 허용 등 과도한 규제가 해소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asj1231@metroseoul.co.kr



'증시 활황' 금융권 가계대출 9.3조 증가

금융위, 5월 말 은행권서만 6.9조 ↑ 신용대출·마이뉴스통장 등 급증 영향 주담대 940.8조... 한달새 3.2조 증가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시 활황에 따라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마이뉴스통장 등 기타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81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이끌었다. 기타대출 잔액은 240조2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7000억원 늘었다.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개인투자자

들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과 마이뉴스통장 이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40조8000억원으로 한달 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세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수도권 중저가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졌다. 실제로 전세거래량은 4월 3만9000호로 전달 4만7000호 보다 8000호 감소했다.

한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은 7000억원 증가로 전월(2조1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보험은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이날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

세 확대에 우려를 나타내며 금융권에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신진장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고객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활용한 대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외국인 결제편의성 개선 나서

스타트업 크로스허브와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 크로스허브와 '방한 외국인 결제 편의성 개선 및 공동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금융·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고객 대상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외국인 전용 디지털 지갑'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공동 개발한다. 여권 정보와 결제수단을 최초 1회 등록하면 ▲이동 ▲배달 ▲쇼핑 등 생활 플랫폼에서 별도 추가 인증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울러 외국인이 자국 화폐로 충전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도 출시한다.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내 결제 환경 테스트도 함께 진행해 방한 외국인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



목일진 우리은행 AX혁신그룹 부행장(왼쪽)과 김재설 크로스허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는 결제 인프라 구축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크로스허브는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인 '디노랩(DINNOlab)' 참여 기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기업'에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은 핀테크 기업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디노랩 육성 기업과의 실질적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asj1231@metroseoul.co.kr

이억원 "내후년, 지방에 정책금융 164조 공급"

'정책금융 동행' 행사 "韓 도약 위해 지역이 성장중심 돼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정책금융 동행' 행사에 참석해 "총청권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약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첨단기술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기존 산은·기은·신보·기보 외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도 추가 참여할 계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획"이라며 "오는 2028년에는 2025년(130조원) 대비 34조원 증가한 연 164조원의 정책자금을 지방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대기업 등이 정책금융기관에 출연하고, 관련 지역·중소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

생 협력 특례 상품을 공급한다.

지역 에너지 대전환과 한국형 녹색전환(K-GX)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에너지 대전환과 주요산업의 녹색전환이 지역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을 충실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지방 우대 금융의 상시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핵심성과지표(KPI)에 지방 우대 금융 지표를 반영하겠다"며 "지역 정책금융 허브, 창업 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6개 정책금융기관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BNK부산銀 "퇴직연금, 모바일 가입하세요"

가입과정 직원이 실시간 확인·상담

BNK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기반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신규가입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도 모바일을 통해 퇴직연금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가입 신청부터 규약 동의 이후 운용상품 등록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한 가입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가입 과정에서는 은행 직원이 고객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원격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비대면 접수에 상담과 가입지원을 결합한 하이브리

드 방식으로 서비스 완성도를 높였다. 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담당자만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수임 프로세스'도 도입해 안정성과 내부통제 수준도 강화했다.

BNK부산은행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 고객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점의 서류 처리 부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재영 BNK부산은행 WM·연금그룹장은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퇴직연금 신규가입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지털 연금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중심의 금융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sj1231@metroseoul.co.kr